

공군 탄약고 이전 착수

광주 軍비행장 인근으로... 국방부 곧 토지 매입

소음 등 민원 해결... 공군비행장 이전은 장기화

광주시 서구 벽진동에 위치한 공군 탄약고가 광주공항 인근 광산구 도호동으로 이전이 확정돼 국방부가 조만간 토지매입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3면〉

또 국방부는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탄약고 이전 부지뿐 아니라 인근 마을과 취락지구 등을 1천500억원을 들여 모두 매입하기로 해 탄약고 이전, 소음 등 광주시의 해묵은 민원이 해결되게 됐다.

그러나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 데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광주공군비행장 이전은 장기과제로 남게 됐다.

26일 광주 공군부대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가 공군탄약고 이전 부지를 도호마을로 정했으나 인근 마을도 소음 피해를 지기 하라 등의 피해를 우려해 활주로 인근 문촌·신야 마을 등은 물론 취락지구까지 모두 매입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광주시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가 들어갈 예정이다.

서구 벽산동·마북동 등에 걸쳐있는 현재의 공군탄약고는 그 면적이 36만

6천여㎡에 달하며, 그 인근 16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광주 공군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5일 공군부대로부터 이와 관련한 비공개로 공문이 하달됐으며, 조만간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존 공군탄약고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 설정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매입 대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국방부는 3년 전부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장암마을 67가구에 대해 400억 원 이상 투입,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군탄약고 이전과 함께 주변 마을도 1천억원 이상을 들여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공군탄약고 이전과 소음 피해 보상 등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교육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 초 광주공항 인근 주민 3만2천여 명이 제기한 소음피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재웅 부장판사)가 “80억

원 이상 지역 주민 1만3936명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총 215여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는 등 지난 2004년부터 공군비행장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국방부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기로 해 사실상 비행장 이전은 상당기간 뒤로 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군비행장 이전에는 군사적인 문제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으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전한다고 해도 부지를 마련하고, 시설을 갖추는 데 최소한 수 년이 소요될 것이며,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탄약고를 옮기면서 대규모로 부지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탄약고 이전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공군은 “탄약고 이전 부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지역, 잔여지 등 탄약고와 그 주변지역 총 185만㎡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 극락강 안쪽 전체를 공군부대로 편입시킬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마스크 쓰고 진료

26일 전남대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배치된 ‘신종 플루 전담 검진차량’에서 의료진이 기본 검사에 앞서 20대 여성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통합 추진 시·군에 획기적 혜택

SOC 확충·특별교부세 50억 지급 등 광양만권·무안반도 통합 탄력 받을 듯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기로 함에 따라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과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의 통합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말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통합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회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건의는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함에 따라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과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의 통합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자율 통합을 촉진하고자 통합을 확정된 지자체에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산 배분 시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부에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를 설치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전반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를 지급하고,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산 배분 시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부에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를 설치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전반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행정부에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를 설치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전반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나로호 실패, 국산 페어링 미분리 때문

(위성 탐개)

위성, 대기권 소멸한 듯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목표 궤도 진입 실패는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 보호 덮개인 ‘페어링’ 한 쪽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페어링을 조이고 있다가 폭발하는 불투명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기사 2·6면〉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러공동조사위원회인 비행시험위원회 조사 결

과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 1단과 2단 분리, 위성 분리는 성공했지만 페어링 분리 이상으로 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러기술위원회는 발사 215초만에 페어링이 양쪽 모두 벗겨져야 하는데 한 쪽만 벗겨졌으며 이것이 정상궤도 진입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위성의 4배 무게에 달하는 페어링 한 쪽을 매단 채 나로호가 비행했기 때문에 궤도 진입을 위한 속도(초속 8km)보다 1.8km 낮은 6.2km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재수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페어링을 조이고 있

던 불트가 화약처럼 터지면서 페어링이 분리되는데, 이 때 불트를 순간적으로 끊어 비행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페어링을 두 갈래로 떨어뜨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며 “이를 보완하면 내년 5월 2차 발사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페어링 분리 실패로 지구 공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과학기술위성 2호는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대기권에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나로호 첫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내년 5월께 2차 발사를 시도할 계획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금강산서 이산가족 100명씩 만나자”

남측, 적십자회담서 제의

남북은 26일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금강산호텔에서 적십자회담 전체회의를 열고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본격 논의했다.

일 남측 상봉단, 10월6~8일 북측 상봉단이 각각 100명씩 상봉하는 일정을 내놓았다.

상봉 장소와 관련, 남측은 금강산 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을 갖고 개별상봉은 전례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종전에 사용했던 장소를 이용토록 하자고 밝혔다.

또 남측은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한 3대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영산강살리기는 다음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영산강살리기 추진위원회

영산강살리기 추진위원회

영산강살리기 추진위원회